

투자전략

20대 대통령 선거: 영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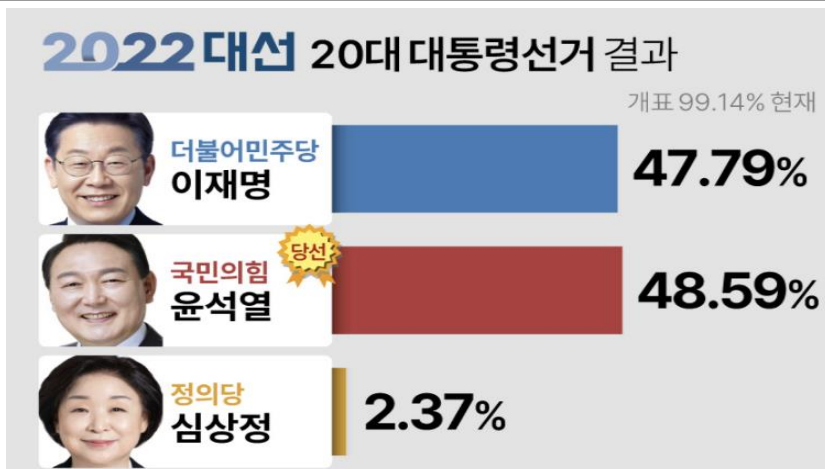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관건

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은 48.57%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7.81%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표차도 25만표에 불과했다. 이는 1) 향후 정국 운영에 난관이 많을 것임을 암시하나, 2) 현 민심이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양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향후 3개월간 민생 회복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 서울 종로(국민의힘 최재형),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경기 안성(국민의힘 김학용), 충북 청주(국민의힘 정우택) 등 5개 중 4개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 중남구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지만, 야당을 탈당 후 입후보한 케이스다. 국민의힘 의석은 106개에서 110개로 4개 증가하게 되며, 국민의당과 합당까지 고려하면 113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172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계개편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당장 가시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은 6월 1일(수) 지방선거를 겨냥해 앞으로 3개월간 민생회복을 겨냥한 대대적 정책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외교/에너지/부동산 등에서는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예고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도표 1.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자료: 연합뉴스 보도 재인용

투자전략 박소연

T. 02) 2004-9095

park.so-yeon@shinyoung.com

변화할 정책들: 외교/에너지/부동산/개인투자자 보호 등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부분은 크게 5개 분야다.

1) 국방/외교정책:
대중관계 악화 우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고려
수위 조절할 수도

첫째, 국방/외교정책이다. 윤석열 캠프는 미중 균형외교보다는 한미일 동맹강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대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캠프 내 인사들 중 외교/안보 참모진에 미국통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임기 시작이 5월 10일부터라 민감한 사안을 먼저 꺼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향후 사드(THAAD) 추가 배치나 쿼드 가입 등에 대한 발언 수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일관계 회복시 반도체 소재 등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여행/교류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련주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재정/재원조달:
채권시장 발행부담 완화,
한은총재 후임에도 영향

둘째, 재정 및 재원조달 측면이다. 윤석열 캠프는 확장재정보다는 균형재정을 선호하고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라 채권시장의 발행 및 물량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안정화 요인이다. 또한 당사 채권담당 조용구 위원은 3월 말 임기 만료되는 한은총재 후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조언했다.

도표2.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정리

분야	윤석열 후보 공약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동맹강화 - 쿼드 가입 점진적 추진 - 사드(THAAD) 추가 배치 -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제재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 내 외교/안보 참모진에 미국통 인사들 다수 - THAAD 추가 배치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한중관계 소원해질 가능성 모니터링 -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상 동시진행하는 쌍궤병진(雙軌並進) 선호했으나 변화 - 대일 외교 회복 시도: 7월 참의원 선거,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완화 모니터링 - 국방/방위비 지출 증가 예상 : 방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 확대
재정운용/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세 아닌 지출 구조조정 선호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코로나 추경 50조 편성 예상 - 채권시장 발행 부담 완화 : 기본소득/적자국채 등 확장적 재정정책 부담 덜해 - 3월 말 임기 만료되는 이주열 한은총재 후임 임명 예정. 실용주의적 인물 예상
에너지/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최강국 건설 목표 - 원전 수명연장 통한 탄소중립 -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가동률 상승, 유틸리티 공기업 적자 완화에 도움 - 소형원자로(SMR) 개발 및 원전 관련 정책지원 가속화 기대 - 원자력 발전 이용률 증가시 천연가스 수입 감소 효과 : 무역적자폭 축소에 도움
건설/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V 상한 80%로 상향 - 임대차 3법 전면개정 추진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추진 - 1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완화 -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 민간주도의 부동산 공급 확대 - 다주택자 종과세율 적용 한시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부동산 시장 회복 요인, 다주택자 종과세율 한시 배제시 거래도 활성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통합 인허가: 국내 주택건설/건자재 업황 회복 도움 - 다만 종부세 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은 국회 통과 필요한 사안 - 여소야대 상황 고려해 조례 개정 등으로 조속 이행 가능한 부분 선추진 예상
개인투자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 폐지 -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도입 - 장기보유 대상 양도소득세 우대 -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 제한 - 신사업 분할 상장 제도 정비 - 공모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담 완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는 예탁금 신규유입으로 이어질 것 -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 정비 후 도입한다는 입장 - 한편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해서는 제도정비 등 가능성 높아 :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피인수기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검토. 지주회사 등 NAV 상승 가능성 염두

정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3)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비율 정상화 등
큰 변화 예상,
원/달러 환율 안정요인

셋째,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비율 정상화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전 수명연장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언급한 바 있다.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인한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 한국전력 등 공기업 적자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이용률 증가시 천연가스 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 있어 무역적자폭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안정 요인이다.

4) 건설/부동산:
여소야대 상황 고려해
행정명령, 조례개정 등으로
조속 이행 가능한 부분
선추진할 것

넷째, 건설/부동산이다. 윤석열 캠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신속화해 물량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국내 주택건설, 전자재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한시 배제 역시 거래 활성화 요인이라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부세 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은 국회 통과 필요한 사안이라 단시일 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조례개정 등으로 조속 이행 가능한 부분만 선추진이 예상된다.

5) 증권/금융시장:
2023년 세법개정안 통과
필요해 시행 여부 불투명,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
제도정비는 가능성 높아

다섯째,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제도개편이다. 윤석열 캠프는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후도입 입장이나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등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피인수기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지주회사 등 NAV 회복이 예상된다.

종합하면, 근소한 표차였지만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정권 중반까지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정책 추진상의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통해 변화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이므로, 상반기는 코로나 안정화 속 재정집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내수경기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Appendix. 모회사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 관련

신사업 분할 및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가치 하락

신사업 분리 후 상장은 주주 이탈을 발생시켜 구주매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모회사 가치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양당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제도로 신사업 물적분할 및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두 대선후보 공약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상장기업 공모주 우선배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신사업 이탈로 기존 주주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판단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모회사 재평가

기존주주들의 이탈과 구주매각은 모회사 가치평가에 있어 절하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이러한 개인투자자 보호제도의 공백은 일부 제도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음. 만약 신사업 분리로 인한 주식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제도를 법규화 한다면, 저평가된 모회사에 대해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 기업분할 및 IPO과정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제도를 개선은 한국증시로 추가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